

“양승태는 사법 살인자다”

노조, ‘양승태 구속, 대법관 사퇴, 피해 원상회복 결의대회’ 열어...양승태, 노동자 목숨 담보로 재판거래

금속노조가 6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 거래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대법관 사퇴, 피해 원상회복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 조합원들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 적폐 청산’에 직접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결의대회를 벌였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과거 재판거래로 망가진 노동자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삶을 제 것처럼 거래한 양승태를 구속하고 재판거래에 부역한 대법관들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재판거래 피해 원상회복 없이 대법원 정상화는 없다”라며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 대한 원상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렬 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라며 “양승태와 재판거래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엄중히 처벌하



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경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대법원의 사법 농단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의 사법 파동과 완전히 다르다. 대법원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력에 재판을 갖다 바친 부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직접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잇따라 증언에 나섰다.

이인근 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택시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은 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데도 미래의 경영상 위기가 예상된다며 후자기업의 정리해고

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잘못된 판결들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라며 “노동자를 직접 살인한 양승태를 왜 구속하지 않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대회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택시회장은 “양승태와 대법관들은 통상임금 소송 무력화를 위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의칙을 적용하고 일할 지급 요건 등의 핏수를 찾아냈다. 결국,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정당한

한 임금을 자본에 빼앗겼다”라며 성토했다. 이대회 지회장은 “김소영 대법관은 심지어 자신이 판결한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대법관이 되자 스스로 뒤집었다”라고 폭로했다.

노조는 양승태와 대법관들이 쌍용차 대량해고의 증거로 채택한 회계조작을 용인함으로써 스물아홉 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별노조 붕괴를 목적으로 노조 규약을 무시한 채 발데오만도 집단탈퇴를 인정했다고 일갈했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다”

양대노총-최저임금노동자위원 위헌법률심판청구... “절차 정당성, 완성도 없고, 평등권 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개악 최저임금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은 절차 정당성과 내용 완성도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5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거리에서 투쟁을 전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 안의 내

용과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알렸다. 이대로 가면 정부와 노동자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두 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시급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노동 3권 침해 기업 범죄 엄중 처벌해야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원청 현대기아차그룹 부당노동행위 고소... “출혈판매 거부한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이하 판매연대지회)가 “사실상 사용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했다”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판매연대지회는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진짜 주범 현대기아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판매연대지회는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영업지역분부, 대리점주 등과 함께 노조 파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법원과 검찰, 노동위원회가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현대차 처벌은 바로잡기는커녕 반복해서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자본은 ▲노조 감시와 탈퇴 종용 ▲교섭거부 조항인 표적 감사와 당직 배제 ▲계약정지 방식 징계와 해고(사원 변호사제) ▲대리점 폐쇄 ▲블랙리스트 작성과



채취업 방해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했다. 사원번호가 없으면 자동차 판매를 아예 할 수 없고 전산상에서 사원번호를 차단하면 마찬가지로.

김선영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리점 소장들이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사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노조를 탄압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대리점 부당노동행위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소 취지 발언에서 “현대기아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례에서 보듯 노동 3권을 직접 침해하는 기업 범죄를 수년간 지행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제수사, 원청까지 수사한다는 메뉴얼까지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며, 판매연대지회 관련 현대기아차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앞으로

금속노동자와 연대해 출혈판매 등 왜곡된 자동차 판매질서를 바로잡고 고용형태를 정상화해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본급 없이 오직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했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노조에 가입한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다.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하고 원청인 현대기아차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다.

김영주 장관, “레이테크 인권탄압·부당노동행위 몰랐다”

레이테크분회, ‘현장노동청 1호 민원’ 접수... 서울노동청, “노사교섭 중재하겠다” 되풀이

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가 6월 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만나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의 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레이테크코리아분회는 노동부가 이날부터 청계광장 등 전국 열 곳에서 문을 연 ‘현장노동청’에 첫 번째로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민원을 냈다.

레이테크분회 조합원들은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임태수 사장이 자행한 폭행과 폭언, 해고 목적 부당발령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설명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어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나영돈 서울노동청장에게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노조 레이테크분회는 이날 오후 서울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과 면담하고,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이 자행한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를 고발

하며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서울노동청은 레이테크분회 상황에 공감한다고 임태수 사장을 불러 면담했다. 임태수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는 변명만 둘러댔다. 분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설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서울노동청은 “노사교섭을 중재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